

(첨부3 : 법률대리인단 발언문)

안녕하십니까?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의 환경보건위원회 소속으로 활동하고 있는 이상현변호사입니다. 저는 오늘 청주매봉공원지킴이 주민대책위원회의 법률대리인단을 대표해서 매봉공원에 대한 민간공원 특례사업의 법적 문제점과 앞으로의 법적 대응 계획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1. 매봉공원 민간공원 특례사업의 법적 문제점

먼저 매봉공원 민간공원 특례사업의 문제점에 대해 말씀 드리겠습니다.

가. 민간공원 특례사업 제도의 취지와 제도 자체가 내재하고 있는 위험성

도시공원은 다수가 어울려 살아가는 도시에서 시민들이 환경권을 향유할 수 있도록 하는 소중한 공간입니다. 따라서 도시공원을 조성하고 유지하는 것은 마땅히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나서서야 할 일입니다. 그런데 그간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민간소유 토지에 위치하고 있는 도시공원을 조성하고 유지하는 일을 소홀히 해왔습니다. ‘재원이 부족하다’는 것이 그 이유였습니다. 이에 따라 매봉공원을 비롯한 여러 공원들은 공원부지에서 해제될 위험에 놓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나온 공여지책이 ‘민간공원 특례사업 제도’입니다. 이 제도는 공공을 대신해 민간이 공원일몰제에 따라 도시공원에서 해제되는 공원 부지에 대해 공원 조성사업을 할 수 있도록 하면서, 공원 용지 일부에 대해서는 개발사업을 할 수 있도록 합니다. 민간사업자가 기존 공원 면적의 70%를 공원으로 조성해서 지방자치단체에 기부채납하면, 나머지 30%를 개발해서 아파트를 분양하는 등의 수익사업으로 비용을 조달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쉽게 말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에 재원이 부족하니, 대신 민간자본을 통해서 도시공원을 조성하자’는 제도입니다.

따라서 ‘민간공원 특례사업’의 방식으로 도시공원을 조성할 때에도, 가장 중요한 것은 ‘기존의 도시공원을 훼손하지 않고, 그 기능을 최대한 살리는 것’입니다. 개발사업을 통한 민간사업자의 수익을 극대화하는 것은 결코 그 제도 본연의 목적이 될 수 없습니다. 개발의 수익성을 위해서 ‘공원으로서의 가치’를 후퇴시킬 수는 없다는 뜻입니다. 그러므로 민간공원 특례사업은 ‘기존의 도시공원을 훼손하지 않고, 그 기능을 최대한 살린다’는 대전제 하에서만 추진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전제 하에서도 민간에 의한 도시공원의 조성이 가능하다면 민간공원 특례사업이 추진될 수 있지만, 만약 그렇지 않다면 민간공원 특례사업은 추진되지 말아야 합니다. 다시 원칙으로 돌아가서, 공공에 의한 공원조성이 추진되는 것이 제도의 취지에 부합합니다. 그렇지 않다면 기존의 민간공원 특례사업에서 논란이 되었던 것처럼 ‘특혜 논란’에서도 자유로울 수 없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민간공원 특례사업의 경우 개발에 따른 문제점을 충분히 검토하고, 인근 주

민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는 과정이 더욱 중요합니다. ‘공원의 기능과 인근 주민의 의견을 중시하다보면 사업 추진 자체가 어려우니, 수익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해서 사업이 가능하게 하자’는 관점은 본말이 뒤바뀐 것입니다. 매봉공원 민간공원 특례사업에서도 이점이 반드시 고려되어야 합니다.

나. 매봉공원 개발사업의 절차적 문제점

이러한 관점에서 보았을 때, 매봉공원 개발사업은 여러 문제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특히 절차적인 문제가 있습니다. 인근 주민들의 충분한 의견 수렴을 거치지 않고 진행되고 있으며, 사업의 구체적인 내용도 제대로 공개되지 않은 채 추진되고 있습니다. 청주시가 밀실에서 사업을 추진한 후에 이를 ‘기정사실화’하려는 것은 아닌지, 의심케 하는 대목입니다.

첫째, 청주시가 고시한 매봉공원에 관한 ‘공원조성 계획결정’과 ‘실시계획인가’에는 사업의 구체적인 내용이 담겨 있지 않습니다. 개발사업을 추진할 구역을 정하는 정도의 내용만을 담고 있습니다. ‘어떻게 기존 매봉공원의 기능을 유지시킬 것인지, 개발사업의 구체적인 내용에 비추어 보았을 때 우려되는 점은 없는지’에 대한 고려가 없습니다.

둘째, 청주시는 사업의 가장 기초적인 자료인 환경·교통·재해 영향평가서조차 공개하지 않으려 했습니다. 정보를 공개하라는 충청북도 행정심판위원회의 결정도 무시한 채, 긴 재판을 이어갔습니다. 결과적으로 법원의 판결을 통해서 공개되기는 했지만, 청주시의 ‘밀실행정’에 대해서는 우려를 거둘 수 없습니다.

셋째, 인근 주민들의 의견수렴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청주매봉공원지킴이 주민대책위원회’는 청주시에 여러 차례 면담 요청, 서면 질의 등을 했지만, 청주시는 불성실한 답변만을 내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민설명회에서도 청주시 측의 ‘깜깜이 사업추진’이 주되게 지적되기도 했습니다.

다. 매봉공원 개발사업의 실제적 문제점

이와 같이 불투명한 절차 속에서 사업이 추진되다 보니, 그 내용적인 측면에 있어서도 여러 문제가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는 앞서 발언에서 자세히 말씀해주셨으므로, 저는 간략하게만 짚어보겠습니다.

무엇보다도, 현재 알려진 계획대로라면 매봉공원은 도시공원 본연의 기능을 상당 부분 상실하게 됩니다. 현재의 개발 계획은 공원을 관통하는 도로를 만들고, 매봉공원과 주거구역 사이에 그 둘을 가르는 도로를 만들거나 넓히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대로 사업이 진행된다면 매봉공원은 크게 훼손되어 버릴 것입니다. 주민들이 매봉공원에 접근하는 것도 크게 제한될 것이고, 특히 장애인과 노약자와 같은 교통약자의 경우 더욱 어려움에 놓일 것입니다. 인근 학교 학생들이 ‘생태교육의 장’으로 매봉공원을 이용하는 것도 상당부분 제한될 것입니다.

그 외에도 개발사업으로 인해 교통량이 크게 증가할 것이 예상됨에도 이에 대한 교통대책이 충분하지 않은 문제, 도로 신설에 따라 인근 주민들은 소음으로 인한 피해를 겪어야 한다는 문제, 고층건물이 들어섬에 따라 도시공원의 경관이 훼손되는 문제, 산지지역의 개발로 인해서 재해의 위험이 높아지는 문제, 공원이 주거지역으로 개발됨에 따른 교육시설 부족 문제, 법정보호종인 맹꽁이의 서식지가 파괴되는 문제 등도 예상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들은 법적으로 보았을 때, 매봉공원 개발사업에 관한 인허가가 위법한 것으로 볼 수 있는 사유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각각의 문제들에 대해서, 향후 법률대인단은 추가적인 자료를 확보해서 면밀하게 검토하고 밝혀낼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2. 향후 법적 대응 계획

이와 같이, 현재 추진되고 있는 매봉공원의 민간공원 특례사업은 여러 법적 문제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법률대리인단은 '청주매봉공원지킴이 주민대책위원회'와 함께 이에 대한 법적 대응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법률대리인단은 조만간 고시될 것으로 예상되는 실시계획인가 등 민간공원 특례사업에 관한 인허가에 대해서 행정소송을 제기할 예정입니다. 이를 통해서 매봉공원 개발사업의 문제점들을 밝히고, 이를 바로잡으려고 합니다. 소송 과정에서는 이번 개발사업이 정말 도시공원의 보존을 위한 것인지, 아니면 개발에 초점이 맞춰져 있는 것인지를 분명하게 밝혀나갈 계획입니다. 그리고 이번 개발사업의 절차가 정당한 것인지에 대해서도 법적인 판단을 구할 것입니다.

향후 진행될 소송에 대해서 많은 참여와 관심을 부탁드립니다.